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3호

체육시민연대

“성폭력 저지른 야구소프트볼협회장, 즉각 사퇴하라”

이선명 스포츠경향기자

스포츠학폭

피해자 입만 보는 스포츠계...학폭 선수도 구단 묵인 땀 프로선수

이주원, 박재홍 서울신문기자

이종세 칼럼

체육계에도 제20대 대통령 선거 바람 분다

이종세 MK스포츠기자

[취재파일]

스포츠윤리센터 ‘채용 비리’ 논란의 내비효과

정형근, 박대현, 배정호 SPOTV기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독] ‘체육계 영원’ 스포츠 독립부처 신설... ‘신호탄’ 쏘았다

최기창 쿠키뉴스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2021년에도 체육시민연대에 후원해주신 회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 연락처(이메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 드립니다.

혹,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분들은
사무국(02-2279-8999)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들도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회원정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에도 대한민국 스포츠의 변화를 위한
체육시민연대 후원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체육시민연대 “성폭력 저지른 야구소프트볼협회장, 즉각 사퇴하라”

“회식 뒤 회장 집에서 발 안마시키다 성폭력”

같은 회사 여성 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 A씨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이 나왔다.

시민단체 체육시민연대는 13일 입장을 내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 A씨가 여성 직원을 사무실·집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안마를 시키고 성폭력을 가했다고 한다”며 “A씨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 대한민국 야구계의 수장으로, 이 사건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체육시민연대는 △A씨의 즉각 사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공식사과와 후속조치 단행 △대한체육회 차원의 규정 처벌 △문화체육관광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체육시민연대는 “폭력,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로 선수들이 사망하고 법까지 제·개정되며 새 조직이 생긴 마당에 유력한 스포츠단체장의 성폭력 사건은 간과할 수 없다”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즉각 사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 정관에 의거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원에 대해 스포츠 공정위를 개최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유야무야 넘어가는 전례가 되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체육시민연대는 “위력에 의한 갑질은 물론이고, 성폭력 범죄행위로 타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A씨는 즉각 사퇴하고 조속한 시일 내 공식사과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MBC에 따르면 A씨는 여성 직원인 비서 B씨에게 성추행을 하고 사무실과 집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안마를 시켰다. 해당 내용은 B씨가 피해 정황을 담은 육성 녹음과 다이어리에 담겨 있었다.

B씨는 결국 사직서를 낸 뒤,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자동차 부품 및 일반 산업용 부품 전문 기업 대표이사로 지난해 1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피해자 입만 보는 스포츠계... 학폭 선수도 구단 묵인 맨 프로 선수

서울신문
이주원, 박재홍 기자 2022.01.14

“프로 진출을 앞둔 학생 선수들은 과거 자신이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미리 사과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 폭력’(학폭)이나 인성 문제가 선수 생명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거 같습니다.”(배구계 관계자)

“정부가 학생 선수들의 (학폭) 징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현장 분위기와 달라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랴부랴 인권 교육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바쁜 운동 스케줄 때문에 형식적으로 진행합니다.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정부가 지난해 2월 배구선수 이재영·다영(26) 자매의 학폭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1년이 다가온 현재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학폭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당초 엄정 대응을 약속한 것과 달리 곳곳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는 언제라도 ‘제2의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데이트 폭력 도 3경기 출전 정지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2월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프로와 실업팀 입단에서 학폭 이력을 확인하고 선수 선발에 제한을 두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스포츠계는 지난해 신인드래프트부터 ‘학폭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KOVO)과 한국야구위원회(KBO) 등은 학폭 이력을 가진 선수에 대해 드래프트 참가와 구단 입단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했다. 대한체육회 회원단체가 주최하는 대회에서도 학교폭력예방법상 처분 결과에 따라 참가 제한부터 선수 자격까지 박탈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엄정 대응에도 학폭 이력을 가진 선수들이 여전히 프로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종목과 달리 축구는 드래프트제가 아니고 구단이 개별적으로 자유계약을 진행한다. 각 구단은 지난 3일부터 신인 선수가 등록할 때 학폭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제출받는다. 하지만 학폭 이력 선수들을 등록하는 데 문제가 전혀 없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13일 “서약서는 선수가 학폭 이력이 있다는 일종의 통보 개념”이라며 “학폭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할 것인지 여부를 구단 의사에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데이트 폭력’ 논란에도 구단이 무리하게 복귀시킨 배구선수 정지석(27·대한항공)의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대한항공은 팬들의 반발에도 정지석에게 고작 2라운드 잔여 경기(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리고 서둘러 코트에 복귀시켰다. 여기에 선수의 처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드래프트나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KBO는 학폭으로 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선수의 드래프트 참가를 제한하지만, 기간이 만료되면 참가할 수 있다. 김유성(고려대)도 지난해 9월 징계 만료로 올해 드래프트를 신청할 수 있다.

사각지대는 또 있다. 연맹이나 구단이 선수의 학폭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서약서나 피해자 폭로뿐이다. 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사통과’라는 얘기가.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징계 정보 시스템’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당국 “무기한 출전 정지는 어려워”

스포츠 현장의 성적 지상주의도 정책 후퇴의 원인 중 하나다. 스포츠계는 학폭 가담 선수를 원천 차단하면 당장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한다.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학폭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속내다. 정부 관계자는 “학폭 이력이 있는 선수를 어떤 수준으로 제한할 것인지 논의를 했는데, 무기한 정지하는 건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에 위반된다는 법률적 문제가 있었다”며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를 계속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체육계에도 제20대 대통령 선거 바람 분다 [이종세 칼럼]

체육계에도 대선(大選) 바람이 분다.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선거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등. 체육계는 특정인을 “이재명 사람이다” “윤석열 사람이다”하며 사분오열의 양상을 띤다. 올림픽 여자핸드볼 금메달의 임오경(민주당·경기 광명)과 동계올림픽 썰매 종목 우승 총감독 이용(국민의힘·비례대표)은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그렇다손 치자. 대한체육회 간부였던 A씨와 B씨는 약속이나 한 듯 모 후보 줄에 서서 눈도장을 찍었다가 최근 상대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자 주춤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양다리라도 걸쳐 몸보신하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반면 C씨와 D씨는 반대편 후보 진영에서 뛰면서 각자도생을 노리고 있다. 그래도 이들의 행보는 나은 편이다. 문제는 체육인의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대선 주자들을 초청, ‘보고회’나 ‘토론회’등을 개최하면서 공적 예산과 인력을 소모하며 개인의 영달을 도모하는 행태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지층 확충에 혈안 돼 있는 대선후보들이 유권자들 앞에서 무슨 말을 못 하겠는가. 체육계 예산지원, 복지 확대 등 공약(公約)을 남발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공약(空約)이 되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은가. 아울러 코로나19의 창궐을 막기 위해 자영업자들의 음식점소 모임은 ‘6인 이하’로 제약받는 상황인데 아무리 공적 모임이라 해도 수백, 수천 명이 모이는 체육인 행사가 과연 바람직한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올림픽공원에서 대선후보 초청 체육인대회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제20대 대통령 후보와 정부, 국회 체육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 대한민국 체육인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대한체육회가 최근 펴낸 우리나라 체육발전 중점 추진 공약집 ‘제20대 대통령 후보에게 체육인이 바란다’의 발간 보고회도 겸해 열린다. 이 자리에 대통령 후보는 물론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 단체 등 중앙은 물론 지방에서도 많은 체육인이 상경, 자리를 함께할 예정이다. 대선 후보들이 핸드볼경기장 좌석을 짝 메운 체육인들에게 그럴듯한 공약을 내걸 것은 불문가지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2월27일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한 중점과제 논의를 위해 ‘체육인이 바란다’ 정책토론회를 주관했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채익 위원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수 국민의힘 간사, 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행사는 미래 체육 100년을 선도할 주요 체육 정책 및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방체육회 대표단, 경기단체연합회 회장단,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대표단, 학교 운동부 지도자위원회 대표자연합, 전국직장운동경기부 연합회 회장단, 스포츠클럽협의회 회장단, 생활체육지도자 협의회 회장단, 각 체육 단체 대표단 등 각계 체육 분야를 대표하는 임원단이 참석했었다. 이날 김승곤 대한체육회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은 발제를 통해 양질의 체육계 일자리 창출, 국민의 스포츠 참여 기반 조성, 전문체육 발전을 위한 우수선수 발굴 육성 기반 강화, 학교체육 정상화 추진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50%를 대한체육회의 목적사업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의 이 같은 주장은 연·기금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과 배치돼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 오히려 대한체육회가 수익금 배분을 둘러싸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벌이는 ‘밥그릇 싸움’ 짬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음 장 계속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2017 대한민국 체육인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문재인 캠프 제공

5년 전에도 대선 앞두고 개최...실효 없는 공약 남발

대한체육회의 이 같은 행사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대선후보를 겨냥한 '눈도장 찍기용'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5년 전인 제19대 대통령 선거일(5월9일)을 한 달 앞둔 2017년 4월9일 오후 2시 서울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당시 대한체육회장 취임 6개월 정도였던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문체부 관료 출신과 체육인들이 주도한 '2017 대한민국 체육인대회'가 오는 25일 열릴 '2022 대한민국 체육인대회'와 똑같은 '판박이 행사'였다. 그날 대한민국 체육인은 거의 모였다고 할 수 있는 역도경기장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이기흥 회장의 안내를 받아 입장했고 이어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참석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후보를 대신해 염동렬 씨가 나왔고,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 대신 송기석 씨가 참석했다. 필자도 한국체육언론인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 본부석이 아닌 관중석에서 행사를 지켜보았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은 국위 선양에 앞장서는 체육인들에게 물심양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그러나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유승민과 심상정 후보도 문 후보와 비슷한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난다.

하지만 지난 5년간 한국체육은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지난해와 올해의 대한체육회 예산은 4000여억 원으로 5년 전과 별 차이 없이 대동소이하다. 올 대한체육회 예산은 2022년 국가 예산 607조 원의 0.1%에도 미치지 못하고, 7조 원이 넘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과 비교해도 5% 수준이다. 오히려 국가대표팀 경기력은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과 2020 도쿄올림픽에서 일본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아시아 3위권으로 퇴보했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따라 각국 정부가 해당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듯 체육계 인사의 무분별한 정치 관여도 자제돼야 한다"며 "대선 후보를 초청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을 듣는 것보다는 체육인 자질 향상과 친선을 도모하는 모임을 갖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종세(용인대학교 객원교수·전 동아일보 체육부장)

스포츠비리조사실

[취재파일] 스포츠윤리센터 '채용 비리' 논란의 나비효과

2020년 8월 체육계 비리와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자들의 '2차 피해'와 채용 비리 논란, 내부 불화로 파열음을 낳고 있다. 뼈를 깎는 자정 노력으로 채용 과정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털고 설립 취지를 되새기는 '재출범에 가까운'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범 1년 5개월여가 흐른 지금도 채용 비리 논란은 그칠 기미가 없다. 부정 채용 의혹의 당사자가 측근 발탁을 위해 공채 심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잘못 낀 '첫 단추'의 폐해...고스란히 체육인의 눈물로

잘못 낀 첫 단추가 설립 3년 차를 맞은 현시점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하키계 '미성년자 폭행·폭언 사건'이 대표적이다.

용인 소재 대학 하키부 선수들은 중학 시절 지도자에게 당한 폭행·폭언과 이로 인한 심리적 외상을 고발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직후 신고했다.

이들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고(故) 최숙현 사건 이후 출범했기 때문에 설립 취지를 믿고 신고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피해 선수들의 믿음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신고 직후 피해 선수들은 심각한 2차 피해에 시달렸다. 신고 후 일주일 만에 신분이 노출됐고, 학교 기숙사에서 쫓겨났다. 단체 훈련도 참가할 수 없었다. 조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신고를 철회하는 선수도 생겨났다.

2차 피해는 신고하지 않은 일반 선수에게로 번졌다. 폭력 지도자가 학교를 떠난 이후 하키부는 정상적으로 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고 후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도 마찬가지다. 지도자 없이 개인 훈련을 하고, 운동을 그만두는 선수까지 생겨나는 등 각종 불이익에 신음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발 '2차 피해'는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자의 '2차 피해'는 인재(人災)...1년 5개월 지나도 미해결

스포츠윤리센터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인재(人災)로 분류했다. 제대로 꿰지 못한 첫 단추의 병폐는 고스란히 피해 선수들이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키부 폭행 사건을 총괄한 부서 책임자가 A실장, 일선 담당이 B조사관이다. 둘은 센터 내 대표적인 채용 비리 의혹 당사자"라며 "이들은 사건을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신고자의 2차 피해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보통 3개월 안에 사건을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센터 규정이다. 해당 사건이 2020년 9월 접수됐으니 원래는 아무리 늦어도 12월 초엔 종료가 돼야 했을 사안이다. 제때 매듭지었으면 여러 후유증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음 장 계속

실제 스포츠윤리센터가 7개월이 넘도록 하키부 폭행 사건 종결에 실패하자 대한하키협회가 지난해 3월 스포츠공정위를 선제적으로 열어 '자격정지 3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체육계 인사는 "센터의 의미는 조사를 공정히 해 해당 종목협회에 징계를 요청하는 것"이라면서 "종목단체에서 먼저 징계를 내려버리면 (센터에서) 7개월 넘게 조사한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센터의 존재 의미가 불투명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체육회가 '징계 관할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대한하키협회의 징계를 무효 처리하자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심의할 기회가 생겼다. 윤리센터는 경기도체육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수원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이 사건을 다시 다른 결과 자격정지 3년은 오히려 1년으로 감경됐다.

스포츠윤리센터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하키부 이슈뿐 아니라 B조사관이 맡은 다른 사건들도 계속해서 2차 피해 호소가 나오고 있다. (B조사관과 A실장) 두 사람은 스포츠에 일자무식이다. 체육계 생리를 전혀 모른다. 그러니 감독과 선수의 관계, 기숙사 생활, 국가 대표 선발 등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진다. 하키부 사건을 둘러싼 난맥상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덧붙였다.

◆A실장의 반박 "체육계 생리 몰라도 전혀 문제없다"

A실장은 스포티비뉴스와 인터뷰에서 관련 비판을 모두 부인했다. "사실 하키부 건은 (지난해) 1월에 조사가 다 끝났다. 다만 2차 피해 실태가 새롭게 나와 추가 조사를 했던 것"이라며 "여기에 (지난해 3월) 심의를 검토하던 중 대한하키협회가 공정위를 꾸린다고 발표해 우리로선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스포츠 인권 및 행정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스포츠 쪽 경험이라는 게 대체 뭐냐. 오히려 여기서 느낀 건 '스포츠를 너무 잘 알면 (가해자들에게) 물들 수도 있겠구나'였다. '이게 무슨 문제야' 하며 넘어갈 여지가 오히려 높은 거다. 체육 계통 경험이 없다는 게, 스포츠 분야 생리를 모른다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B조사관에 대한 질문에 현 사무국장과 A실장은 "중요한 건들이 B조사관한테 많이 가 있었다. 누구도 그 사람의 업무능력을 재단하면 안 된다. 업무의 부담도 많이 갖고 있었고, 본인의 개인적 고충도 있었다. 그런 것을 해소해 나가면서 조사하는 것이다. 나름대로 B조사관도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센터 지난해 12월 조직 개편...사라진 '인권진흥실'

지난해 스포츠윤리센터에 투입된 예산만 약 53억 원에 이른다. 윤리센터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빈약한 지원과 인원 부족이 거론돼 올해는 61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스포츠윤리센터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윤리센터 내 조사관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 국가인권위나 경찰과 비교하면 인당 맡은 사건이 훨씬 적다. 근본적인 문제는 A실장이다. 수사 지휘를 아예 안 한다. 의지가 전혀 없다. B조사관이 맡은 하키와 양궁, 핸드볼, 철인3종 등 사건은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센터로 1인 시위를 하러 나오는 사람들도 생겼다. A실장과 B조사관을 형사 고발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12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인권진흥실 내 인권대응팀이 사라지면서 '인권 조사'의 기능은 조사실이 전담하게 됐다. 인권진흥실은 '정책실'이 됐고, 정책실은 신설 사업기획팀과 교육홍보팀으로 구성됐다.

'인권 전문가'로 데려온 A실장은 '인권'이 빠진 정책실의 실장이 됐고, B조사관은 경기지역사무소 조사관으로 발령 났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설립 이후부터 '전문성 부족'을 꾸준히 지적받았다. 그런데 설립 당시 본인의 지원 분야 및 경력과 맞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는 부서장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장 계속

◆스포츠윤리센터 '채용 비리' 의혹 전면 부인...“문체부에서 주관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리센터는 “현 사무국장과 A실장, B조사관이 설립 당시 채용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설립 당시 채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했다”고 반박했다.

문체부 감사실은 지난해 스포츠윤리센터 감사를 통해 윤리센터 실무지원단 2명에게 각각 감봉과 견책 처분을 내렸다. 문체부는 감사 과정에서 사무국장과 A실장 등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유병채 체육국장은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당시 채용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채용 과정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 미비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체부 산하 윤리센터는 '채용은 문체부가 주관해서 우리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황당한'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A실장의 측근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윤리센터는 “사무국장이 내부 직원들의 인사위원회 개최 요청을 당시 이사장 직무대행(고려대 류태호 교수)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 이사장 직무대행은 '내가 책임지겠으니 지시대로 하라'고 했고, A실장의 면접점수를 제외하고 합격자를 선발하는 후속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류태호 교수는 스포티비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얘기 하고 싶지 않다. 그 쪽(스포츠윤리센터)은 너무 복잡하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당시 스포츠윤리센터를 담당한 문체부 관계자는 “(채용 합격) 발표 날로 기억하는데 윤리센터 관계자가 최종 발표를 하려고 보니 '제척 기피' 문제를 발견했다. (C가 처음 지원했을 땐) 제척 기피를 했는데 두 번째 지원에선 제척 기피를 안 했다고 말해서 그때 나도 조언은 건넸다. '지금 채용 때문에 계속 논란을 빚어왔는데 (이런 사안은)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논란이 발생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2020년 10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당시 감사원 감사는 이뤄지지 않고 문체부 감사로 이어졌지만 감사 결과에 비판이 쏟아졌다.

1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의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국회 상임위에 요구했다.

스포츠윤리센터에 몸담았던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가 이뤄져야 모든 채용 비리 문제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다. 문체부 감사는 채용 비리 당사자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마무리됐다.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채용 비리 문제를 털어내고 스포츠계 인권과 폭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단독] '체육계 염원' 스포츠 독립부처 신설... '신호탄' 쏘았다

체육계의 염원으로 평가받는 '체육 독립부처'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미래 산업으로 평가받는 '스포츠'가 앞으로 제대로 육성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쿠키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체육 관련 사무와 교육부의 학교 체육 관련 업무 등을 함께 관장하는 '체육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스포츠' 관련 사무는 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다만 1국 6과 조직으로 구성돼 산업의 규모에 비해 다소 담당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부각된 상황에서 스포츠과학 분야 육성, 학교체육 활성화, 체육인 인권, 프로스포츠 청사진 제시 등을 한꺼번에 관리할 전문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스포츠 산업'은 미래 먹거리이자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녹색산업으로 꼽힌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수원시 등의 지자체는 스포츠를 '산업'으로 보고 프로야구단·프로농구단 유치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복지와 체육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일부 지방 지자체 역시 적극적인 체육 행정을 통해 전지훈련 및 동계·하계 훈련 유치, 아마추어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건강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바탕으로 스포츠가 국민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보탬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체육계의 환경 변화와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체육부 신설'이라는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미다.

물론 여전히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다만 임 의원 등이 제안한 '체육부' 신설은 스포츠 산업을 제대로 육성을 위한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일부 국제대회만을 노린 '반짝'하는 관심이 아니라 산업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임 의원은 11일 쿠키뉴스에 "스포츠는 모든 국민이 즐겨야 할 기본권이며 건강·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와 융·복합할 수 있는 분야"라며 "스포츠 관련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과 스포츠 복지를 바탕으로 한 여가 문화 확산 등의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수요자 중심의 사업 확장을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신체활동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삶을 유지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환의 미래를 열기 위해 체육 독립부처 신설을 포함한 스포츠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정책 과제로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간 스포츠 소식

남녀 아닌 '제3의 성' 선수가 동계 올림픽에 첫 출전한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73429&ref=A>

경남도, 스포츠산업기업 디지털 사업화 육성...국비 확보 총력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7064300052?input=1195m>

조코비치·어빙·디샴보...코로나19 백신 거부하는 스포츠 스타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5042800007?input=1195m>

스마트 안경·콘택트렌즈...스포츠시장에 뛰어들다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201160307003&sec_id=530101&pt=nv

한국프로스포츠협회 5대 회장에 조원태 KOVO 총재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0124900007?input=1195m>

430억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8명 잡았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10_0001718858&cID=10807&pID=10800

대구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https://www.nocutnews.co.kr/news/5687792>

문체부 오영우 차관 "스포츠산업 혁신 기반 조성 사업 확대할 것"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12_0001722485&cID=10501&pID=10500

"초등 스포츠 강사 고용불안 해소, 처우 개선" 촉구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6985>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